

상업포장 공간비율 측정방법 확정

공진청, 필요공간 용적 3mm로 규정

앞으로 제품의 보호, 보전을 위해 완충 또는 고정재의 사용이 필요한 제품은 체적을 구하는 입방체(가로, 세로, 높이)에 외접하여 일률적으로 필요공간 용적을 3mm로 해야 된다.

단 포장 내용물이 150ml 또는 150g 이하인 단일제품으로 완충, 고정, 자동포장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입방체에 외접한 필요공간을 1.5mm로 일률 적용한다.

공진청은 이같은 내용의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 비율 측정방법(KS A 1005)을 확정 고시했다.

공진청은 그동안 과대포장의 규제시 기준 측정방법의 애매했던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 적정포장을 강력히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고시는 포장용적, 제품체적 산출을 위한 치수측정은 캘리퍼스 및 끈은자를 사용하여 mm단위로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측정하고 각 부위별(가로, 세로, 높이 등)로 3회 측정하여 평균치로 산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으로 측정이 곤란한 용기(병종류 등)의 체적 또는 용적의 측정은 이화학용 유리기구 등을 사용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측정토록 했다.

포장공간비율은 포장용적에 포함시키며, 제품의 보호, 보전을 위해 완충, 고정재를 필요로 하는 종합제품의 포장에 있어 포장상자의 두께가 10mm이하인 경우에는 포장상자의 앞뒷면 및 양옆면에 한하여 두께가 10mm에 미달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피의 60%를 포장용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 고시된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은 일본의 5mm보다 강화된 것으로 포장상자의 두께를 얇게 할 경우 기업에 혜택을 주는 등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고시에서는 공간비율측정제품 대상에서 향수 등 소형제품이 제외돼 사실상 과대포장으로 인식되던 제품에 대한 규제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진청은 이번에 확정된 KS A 1005기준에 의거 공간비율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우선 6개월 이내에 개선이행명령을 지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수도권에 중기 자동화단지 설립 계획

중진공, 700억들여 80개사 입주

중진공(이사장 채재익)은 국내 중소기업의 설비자동화를 위해 수도권 인근에 중소기업 생산자동화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중진공은 중소 제조업체들의 자동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부천 등 수도권 인근에 1만평 규모의 중소기업 생산자동화단지를 조성, 약 80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중진공은 지난해 실시한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이 중단된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자동화 투자욕이 저하되고 있는 점을 감안, 총 7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해 모범적으로 자동화 설비를 갖춘 생산자동화 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이 단지는 아파트형 공장을 절충한 복합건물로 짓되 공동 전시장도 운영할 계획이다.

중진공은 기계 유공압전장 자동화기기 요소부품업체를 입주시키고 가공조립전문기 운반, 포장, 치공구, 검사계측, 소프트웨어 등을 유치키로 했다.

중진공은 생산자동화에 대한 투자의욕을 높여주기 위해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기금 지원을 통해 이 단지를 조성하고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장기 저리로 자금을 지원해 줄 예정이다.

색채상표도 보호받는다

특허청, 관련법 개정

오는 96년부터 컬러화된 색채상표도 상표법으로 보호받게 된다.

특허청은 그동안 흑백상표만 등록할 수 있었으나 색채상표까지도 등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색채상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허청은 올해말까지 색채상표의 인정범위나 등록시의 색채표기방법 등을 논의, 국내 현실에 가장 적합한 색채상표 보호형태를 찾아내고 내년중 관계법령을 개정, 96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를위해 산업계·학계·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색채상표제도 도입 실무작업반을 설치, 4월27일 첫번째 전체회의를 가졌다.

색채상표의 도입으로 상표의 개발, 제작단계에서부터 산업 디자이너 등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활발해져 국내기업의 상

표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색채상표는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20여개국에서 보호해 주고 있는데 각국별로 인정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중기 ISO인증획득 지원

공진청, 100개업체 선정 지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SO 9000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공업진흥청은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차적으로 150개 업체를 선정, 15일간의 진단지도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100개 업체를 골라 ISO 9000 인증을 획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차 지도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장과 과장급 추진책임자를 ISO 9000 인증 실천 핵심요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진단지도 경비는 산업진흥청이 90%를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기술신용보증 등과 협의, ISO 9000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증을 서주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KS 표시 허가공장의 경우 공장심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유업 허가제 폐지

상공부, 내년 하반기

석유정제업의 허가제도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폐지돼 정유사업 신규진출이 자유화되고 기존 정유업체의 신·증설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과 나프타에 대한 수출입 승인제도도 올해안에 폐지된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분야 규제완화 추진계획 52건과 시행일정을 발표했다.

상공자원부는 추진계획에서 당초 정유사의 신규허가 및 석유정제시설의 허가제도를 유가자유화 실시와 동시에 폐지키로 했던 것을 유가자유화 예고시점에서 없애기로 했다.

유가자유화는 1년정도의 예고기간을 두고 오는 96년 하반기에 실시될 것으로 보여 정유사 신규진출 허용은 95년 하반기부터 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 금년중 석유정제시설 설치허가때 요구되던 보유저장시설 기준을 현행 60일에서 45일분으로 완화, 정유업체의 신·증설 요건도 개선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와함께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해 일

반가정에 방문판매를 할 수 있는 석유 이동판매소의 허가대상도 현재 주유소 등으로 국한하던 것을 일반 판매소까지 확대하고 각종 석유제품 및 나프타의 수출입 승인제도를 올해안에 폐지키로 했다.

해외 자원개발사업의 허가제도도 내년 상반기중 신고제로 전환하고 전력분야에선 발전사업자의 일반에 대한 전력판매를 일정 범위내서 허용, 부분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전기공사업체의 수급한도액 산정시 공사실적과 자본금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올상반기중 전기공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중기 기계구입 3천억 지원

저리 외화표시 국산기계구입자금

이달 2일부터 낮은 금리의 외화표시 국산기계 구입자금 3,000억원이 중소기업에 지원된다.

또 실명제 이후 장기산업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1,142억원의 신기술 창업자 지원자금이 6%의 싼 금리로 제공된다.

이와함께 농어촌 특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농기주택과 고급가구의 범위가 확대된다.

홍재성 재무부장은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재무부는 당초 시·읍·면에 있는 농기주택에 대해서만 농특세를 물리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이를 서울과 6대 직할시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농특세가 매겨지는 고급가구의 범위를 ▲응접세트·장롱·침대·화장대·탁자·조명기구 등은 개당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의자·결상은 50만원 이상에서 75만원 이상으로 과세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외화표시 국산기계구입자금은 지난 92년12월 처음 도입돼 1조원이 책정됐었으나 올 2월말로 모두 소진돼 중소기업들이 한도를 늘려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 자금은 시중은행과 상업은행 등 모든 은행에서 취급되고 신기술 창업지원자금은 산업은행과 4개 신기술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